

32
 報 道 資 料

(2002. 9. 11)

~~이 자료는 2002년 9월 19일(금) 12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主 題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내용

主 要 內 容

한국금융연구원(원장: 丁海旺)은 9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電子金融去來法 制定方向』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별 첨 : 요약 및 본문 1부.

韓 國 金 融 研 究 院

이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 혹은 확인하실 일이 있으시면,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3705-6270~1, 강임호 박사)

<요약>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로 일반기업과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에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고, 전자자금이체·전자결제서비스·전자화폐 등의 금융업무에 대하여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률제정의 필요성]

- 최근 인터넷 확산 등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전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 전자상거래가 발전되어 전자지급결제가 중대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는 등 입법 환경이 변화하고, 아래와 같은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필요성이 산업계 등에서 제기
- 우선, 非서면성·非대면성이라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기존의 민상법 및 금융관련 법률로는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 둘째, 금융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비금융회사가 일부 전자금융업무에 진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감독장치도 미비하여 제도화된 안정적인 성장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고,
 - 셋째, 전자상거래의 법적인프라의 완비를 위해서는 기제정된 ‘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등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완결하는 전자지급결제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야 할 필요성 등이 제기

— 이러한 재정필요성 때문에 작년10월 당정협약에서 금융제도 및 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가 전자금융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 그동안 재경부 주관으로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정통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함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는 off-line 금융거래와 전달채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금융거래이므로 전자적 특성 때문에 별도 규율이 꼭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되,

○ 전자금융시스템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규정하고, 규율방식도 급속한 전자금융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규율의 큰 틀만 제시하기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제정내용을 구성

— 첫째,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전자문서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신원확인 등 거래의 眞正性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에 대한 발급자 및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 전자금융사고시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하여 접근장치의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사고로 이

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비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토록 규정

— 둘째,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를 위해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 전자금융거래의 생성 및 5년간 보존, 계약체결시 약관을 공개·제시 및 오류정정과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마련 등 최소한의 규제를 규정

— 셋째,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 전자결제서비스, 그리고 전자화폐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진출을 허용

○ 이러한 전자금융업자는 금감위에 등록하고, 금융업무는 구분계리를 실시해야 하며 여신행위 및 금리를 지급하는 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감독을 받아야 함

○ 현재 전자화폐로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전자선불지급수단을 그 범용성과 환금성의 수준에 따라 ‘전자화폐’와 ‘전자선불지급수단’ 차등화하고, 감독수준도 차등화

— 전자화폐의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급준비금을 정립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함을 명시,

— 이러한 전자금융거래 제정방향은 2002년 9월 12일의 공청회 등의 견수렴을 거쳐와 9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

I. 電子金融去來法 制定의 必要性

1. 電子金融去來의 發展

— 최근 급속한 IT발전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기술의 발달로 인터넷뱅킹·온라인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대되어 이용고객 및 거래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 단순한 입출금 처리에서 인터넷 대출, 계좌통합(account aggregation) 온라인보험 등 고도화된 전자금융 서비스도 제공되기 시작

※ 인터넷뱅킹 이용고객 현황

	'01.6월	'01.12월	'02.3월	'02.6월
개인(만명)	719	1,092	1,192	1,395
기업(만개)	24	39	49	53

※ 은행업무중 전달채널별 비중(건수기준) :

· 창구거래 : ('01.6월중) 43.3% → ('02.6월중) 42.2%

· 인터넷뱅킹: ('01.6월중) 5.9% → ('02.6월중) 11.7%

※ 온라인 주식거래비중(금액기준): ('99) 25.4% → ('01) 66.6%

—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자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결제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 전자화폐, e메일자금이체, 폰빌 등과 같은 새로운 전자지급결제 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

※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전망(조원): '01: 29 → '02: 48 → '05: 180

※ 전자화폐(IC, 네트워크) 발행잔액(억원) : ('99말) 1.2 → ('01말) 142.1

<참고> 인터넷 쇼핑몰의 지불수단별 거래비중

사이버 쇼핑몰 현황		01.1/4	01.2/4	01.3/4	01.4/4	02.1/4	02.2/4
거래액 (억원)	전체 사이버쇼핑몰 (경매, B2B, B2C 등)	7,078	7,901	8,615	9,876	13,390	14,642
결제 비중 (%)	온라인 입금 (계좌이체)	28.9	27.8	27.8	26.8	24.8	23.2
	(온라인) 신용카드	68.2	68.6	68.4	70.0	71.6	72.6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	1.0	1.5	2.4	2.1	2.4	2.4
	기 타	1.9	2.1	1.4	1.1	1.3	1.8

- 급속한 IT발전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금융업무가 정보산업화됨에 따라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격히 진전되어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

※ SK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폰번호를 활용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개인간 자금송금, 전자화폐 서비스 등을 제공

- 금융기관들이 비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 콘텐츠개발, 사이버지점 관리 등 전자금융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

※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관련 업무제휴건수 ('00말) 615건 → ('01말) 1,546건

2. 現行 電子金融 관련 法制度의 問題點

1) 전자금융거래도 전달채널(delivery channel)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off-line 금융거래와 같으므로 민·상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 등으로 규율할 수 있으나,

○ 非서면성·非대면성^{*}이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 때문에 이들 법령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

※ off-line 금융거래는 장표, 통장, 증서 등 서면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권리·의무를 확정했으나, 전자금융거래는 서면이 아닌 인터넷, e메일, 휴대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교환하고 권리·의무를 확정

- 또한, off-line 금융거래는 점포직원을 통한 창구거래였으나, 전자금융 거래는 점포직원과 대면이 없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즉각적인 오류정정 요구가 곤란

○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각종 법령 및 약관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

※ 예를 들면 전자적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의 경우 원인파악·책임규명이 어려워 손실의 책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큼

2) 전자상거래의 법적인프라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상품인도·지급결제에 관한 규율이 필요한데,

- 계약체결은 가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으로 규율되고, 상품인도는 상법 등으로 규율되나 전자지급결제를 규율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 전자상거래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소비자보호, 세제지원, 표준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전자지급결제업 등 전자금융업의 발전에 장애가 우려

<참고> 현행 전자금융관련 법제도의 한계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은 전자지급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지급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전자지급업'의 구체적 정의가 없는 실정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다수당사자가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할 수 없고 비은행 및 일반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위임근거가 모호하고, 실제적인 법률관계의 규율이 곤란

3)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은행, 신용카드사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고유업무로 수행하여 온 지급결제 분야에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 이들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흡하여
 - 사고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미국의 경우, 비은행기관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를 금전서비스업(Monetary Service Business)으로 규정하고 주정부의 은행감독당국이 감독함

3. 그동안의 論議經過

- CD/ATM기, 컴퓨터 등을 통한 자금이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1993년과 1997년 전자자금이체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 1997.6 금융개혁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 등 전자금융의 발전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여, 입법 추진 대신 금융기관의 약관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선회
- 그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자적인 대금결제 비중이 증대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도 확산됨에 따라 업계로부터 관련 법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작년(2001년)에 국회에서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 2001.10월 당정협약에서 지급결제는 금융제도·정책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정부가 전자금융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 그동안 재경부 주관으로 금감위, 금감원, 한은, 정통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작업을 추진
 - 금융발전심의회에도 제정방향을 설명하였으며,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

4. 海外의 電子金融 관련 法律制定 現況

-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온라인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발전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전자금융 발전정도에 맞추어 기존 법령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전자금융에 대한 법제화를 활발히 진행중

<참고> 해외의 전자금융관련 입법 현황

— 전자자금이체 등 지급제도와 관련하여

- 미국은 최초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전자자금이체법(1978)을 제정하여 계약효력, 오류정정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무권한 이체·시스템 장애시 책임 등 전자자금이체의 기본틀을 규정
- 덴마크는 1984년에 "덴마크 지급카드법"을 제정하여 지급카드(payment card)와 관련된 지급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보다 넓음
- 영국에서는 1987년 영국정부와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공동으로 설치한 자크위원회가 전자자금이체(EFT)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 독일은 1999년 7월 독일민법전을 개정하면서 자금이체계약·지로그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계약해지 절차, 수수료 등 보수, 이체실행기간 등 자금이체에 관한 조항(675조-676조)들을 삽입

— 새로운 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 EU가 전자화폐에 대한 규정인 'Directive 2000/46'을 만들어, 각국이 2002년 4월까지 법령에 반영할 전자화폐관련규제를 발표
 - 이에 따라 EU 각국이 전자화폐관련법의 마무리 작업단계에 있으며,
- 영국은 2001.12월 EU지침에 따라 전자화폐발행자의 규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2년 4월 관련규정을 확정하였음
- 일본은 현재 「선불카드법」에 의거 은행과 카드사의 전자화폐 발행을 규율하고 있으며, 98년부터 전자화폐법의 제정을 추진중

II. 電子金融去來法 制定方向

1. 基本方向

— 전자금융거래는 off-line 금융거래와 전달채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금융거래이므로

○ 기존의 off-line 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특성 때문에 별도 규율이 꼭 필요한 사항만 규정

① 전자금융시스템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규정

② 규율방식도 급속한 전자금융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규율의 큰 틀만 제시

※ 소비자의 과잉보호는 사업자를 위축시키며, 사업자의 과도규제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감소시키므로, 시장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위험관리를 수행하여,

— 법적 규제가 시장의 선택폭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 법안의 주요 구성

○ 첫째 부문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명확화

○ 둘째 부문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 셋째 부문 :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및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

2. 主要内容

가. 전자금융거래의 기본 법률관계 명확화

< 법률의 적용범위 >

— 원칙적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하되

○ 일반이용자(일반기업과 소비자)에 영향이 없고 기술발전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간의 전자금융거래¹⁾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약으로 규율하고 동 법률의 적용을 배제

※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차액결제, 한은통신망(BOK-wire)를 통한 총액결제 등

①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를 명확화

— 전자금융거래시 사용되는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의 송·수신 시기 등을 명확화

○ 전자거래기본법(6조~10조)의 송·수신 시기와 동일하게 규정(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 등)하되,

· 어음·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은 법령의 정함이 없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 없도록 하고,

· 거래지시가 반복 수신된 경우 금융기관이 임의로 하나의 문서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용자의 신원확인 등 거래의 眞正性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IC카드 등)에 대한 발급자 및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강화
 - 접근장치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하고,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동의시 예외인정)
 - 접근장치는 이용자의 소유이나,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 전자금융거래의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내용의 전자적 확인 및 오류의 통지·정정 절차를 명확화
 - 이용자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매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되
 - 이용자가 거래명세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2주내에 서면 거래명세서를 교부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오류를 인지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오류 발생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이를 2주내에 조사·처리한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
- ※ 자금이체의 누락, 잘못된 금액의 전송 등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거래지시대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조작실수 등 이용자 착오에 의한 경우(주관적 오류)에도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 마련을 검토

② 전자금융사고시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전자금융 거래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시 책임을 부담
- 해킹 등 금융기관·이용자 쌍방 무과실에 해당하는 금융사고시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을 명확화
 - ① 접근장치의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
 - 이용자의 자신고유정보 누설, 접근장치의 노출, 개인 컴퓨터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
- ※ 외국의 경우 비밀번호등을 기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고, 이용자 자신의 소유영역에서 컴퓨터해킹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의 특수성 검토>

- ◇ 증권회사의 업무 중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는 고객의 주문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무제한적일 수 있어서 증권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예외인정을 검토할 필요
- 시세데이터와호가데이터의 전송 지연 및 주문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 등에서 이용자와 증권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법적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도록 함

② 법령상 제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

☞ 비대면·비서면의 전자적 특성과 일정부분 금융기관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손해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단기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

※ 미국 전자자금이체법은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

— 접근장치의 분실·도난과 관련한 책임부담

○ 접근장치의 분실·도난을 신고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 신고이후의 발생한 손실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가 약관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기충전된 금액과 관련한 손실은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

— 다른 법령(특히 여전법의 신용카드 규정 관련)에 의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

<참고> 책임분담과 관련한 국내외 입법사례

법령 등	내 용
여신전문 금융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위조 또는 변조등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과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국> 전자자금 이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권한자금이체(위·변조, 무권대리에 의한 이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 소비자의 책임을 일정수준으로 한정(50달러원칙) ○ 무권한이체에 대하여 50달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무권한이체의 금액중 적은 것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소비자가 접근장치의 도난 또는 분실을 안 후 2영업일 이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기간계산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그 계산서에 나타난 무권한이체를 금융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은 500달러 또는 그에 따른 손실에 준하는 책임부담

[3] 전자지급거래(자금이체, 결제서비스 등)의 법률관계 명확화

—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화

- 금융기관 등은 계약에 따라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 지시된 금액을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금융기관까지 전송할 의무를 부담

— 전자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 등도 명확화

-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독립적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예: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시)에서 지급효력이 발생

- 효력발생시기 이전까지 거래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전자금융거래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관으로 규정시 철회시기를 앞당기거나 철회를 배제하는 것을 허용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급인 으로부터 출금수권을 얻는 것을 의무화하고,

※ 전자문서에 의한 출금수권 제출, 금융기관등이 출금수권을 지급인에게서 직접 받지 않고 수취인이 지급인에게서 받아 제출하는 것 등 출금수권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지급인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출금수권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철회가능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인출지시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하되, 사전에 약관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가능

— 전자채권의 양도가능성 및 대항요건을 명확화

-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을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전자문서에 의하여 하고 당해 전자채권등록기관에 등록하면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을 갖춘 것으로 간주

※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채권등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예: 금융결제원)

<참고> 전자채권의 개념 및 대항요건 규정이유

- ◇ 전자채권이란 전자외상매출채권과 같이 B2B 거래를 위해 기존의 '어음'과 유사한 기능을 전자네트워크 상에서 구현하는 전자지급수단을 말함
- ◇ 전자채권의 법적 성격은 지명채권으로서 그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선 確定日字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민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확정일자란 종이문서를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자채권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전자채권등록기관은 현행법상 公務所로 볼 수 없어 확정일자 기입이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 오프라인상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많아 전자채권 流動化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결제과정은 첨부자료 참조

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①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의 준수와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보존(5년간)을 의무화 (보존방법 및 보존자료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와 영업에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하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

(덴마아크 지급카드법) 지급제도의 이용에 관한 정보는 5년간 보존

- 금감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인증방법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인인증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새로운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

-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위의 약관 심사·변경권고의 근거 마련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및 충전한도 제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 (여전법 조항 이관)

※ 전자자금이체의 1회 및 1일 이용한도

결제카드(직불카드)의 1회 및 1일 이용한도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권면 최고한도, 1일 충전한도

②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의 강화

—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 계약채결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미리 공개·제시하고,

○ 이용자가 요청시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거래수수료 및 서비스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으나,

○ 거래수수료 변경 및 서비스이용료의 신설 및 변경시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일정기간(예:1주일) 전부터 1개월이상 영업점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게시·광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무상 획득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 계좌정보, 거래실적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분쟁처리절차 마련 의무화

○ 해당 사업자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

다.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①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 전자금융업무도 기존의 off-line 금융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금융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업무를 별도의 인가·등록절차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가능
- IT발전에 따라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전자금융업무(전자자금이체, 전자결제서비스, 전자화폐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
 - 비금융기관은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후 전자금융업을 영위
- 다만,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 선불형 지급수단은 범용성·환금성·발행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인가/등록/면제하고 감독수준도 차등화

—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

- ① 전화카드, 버스카드 등 특정상품의 사용에 한정되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와 같이 발행자에게만 통용되는 전자상품권은 범용성이 낮고 환금성이 없으므로 규율 대상에서 제외
- ② 범용성이 전자상품권보다 높고 일정수준의 발행규모를 갖고 있으나, 환금성이 없는 선불형 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금감위에 등록토록 함
 - 영세업자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등록을 면제
- ③ 범용성이 매우 높고 환금성도 보장하는 전자화폐*의 발행자는 금감위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실시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은 별도의 인가 없이 발행가능)

※ 전자화폐와 전자선불지급수단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자료 참조

○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책임으로 수행하는 기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과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관(보조업자, 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을 구분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약정을 체결시에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함

	구분기준	사례	규제
금융기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기관	은행, 카드사 등	관련법률에 의거
전자금융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이용자와 전자지급거래계약을 체결 · 이용자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수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자금이체 (휴대전화이체, e메일 뱅킹 등) · 전자지급결제대행 (PG, 휴대전화 지불 ARS지불 등) ·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 ·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p>등록</p> <p>인가/등록 (연제)</p>
전자금융 보조업자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일부대행 또는 보조	· 단순 정보중개, DB/관리 업자, IT설계·관리업자 등	등록연제
중개결제시스템	금융기관간 거래정보전달 자금정산·결제업무 수행		등록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와 보조업자와의 관계를 명확화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이용자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와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대리인으로 추정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보조업자 선정·감독에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과실로 이용자에 손실이 발생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조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
- 중개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간주
 - 중개결제시스템의 과실로 인한 손실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하고 사후에 중개결제시스템에게 구상권을 행사

②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 확보 및 감독근거 명확화

—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요건을 규정

- 최소 자본금 요건 등 최소한의 내용만 법률에 반영하고 세부적인 인가·등록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참고> 인가·등록요건의 주요항목

-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에 대한 기준 준수
- 사업계획의 건전성 및 타당성, 주요출자자의 재무상태 등(인가의 경우)
- 인가·등록의 결격사유 :
 - 인가·등록의 취소·말소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리절차에 있는 회사 및 그 대주주
 - 신용불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관련 건전성 확보장치 마련

-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인가·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를 의무화
- 이용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및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
- 전자화폐 발행대금 등 이용자로부터 획득한 자산의 건전한 운용

(☞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한 내용은 부록자료 참조)

—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근거 명확화

-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금감위(원)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 감독권,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 규정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접감독(약정서 심의·변경권고)하되 필요한 경우 보조업자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보조업자와 (시행령이 정하는) 제휴계약 또는 발주 계약 체결·변경시 금감위가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전에 약정서를 제출

· 금감위는 당해 약정서에 의해 금융기관등의 건전한 경영이나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경우 관련약정의 시정이나 보완 지시가

· 제휴·발주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조업자를 검사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권한을 명확화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금감위 조치에 대한 재의요구권 및 공동검사요구권을 명시

-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파악 및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관련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

[부록]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및 특칙

가.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의 구분

- 일정 수준의 지급수단성과 범용성을 갖는* 선불형 지급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이의 발행자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함

※ 전자상품권, 가상적립금(마일리지)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배제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가 미리 대가를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관리하고 지급인이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사용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1.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발행인(대통령이 정하는 관계인 포함)외에 제3자에게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

- 다만, 개발업자, 영세업자 등의 경우 일정기준* 미달자는 소규모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없이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예시) 미상환 발행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가맹점·쇼핑몰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중 범용성·지급수단성이 높고 환금성을 갖춘 것을 '전자화폐'로 규정하고, 금감위에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에게만 전자화폐 발행을 허용

▷ “전자화폐”: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매체에 입력된 정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이 정한 금융기관 또는 금감위로부터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또는 영업장에서 이용되는 것
2. 현금, 예금 등과 교환되어 자금영수 가치이상으로 발행되지 않을 것
3.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예금 등으로의 환금이 보장될 것

—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필요성

-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은 범용성·환금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범용성·환금성이 낮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 범용성·환금성이 높은 전자화폐와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부담을 줄 소지가 있음

<참고>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高 ←범용성 ←환금성			범용성→ 환금성→低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소규모	전자상품권등
	(인가)	(등록)	(등록 면제) (규율 대상에서 제외)

— 전자화폐 발행업의 인가제 도입 필요성

- 전자화폐는 현금과 1:1 교환이 보장되는 환금성이 높은 지급수단으로 전자화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산운용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

※ 선진국 등 각국은 전자화폐 발행을 비금융기관에 대해 허용하는 경우에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실시

<참고>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화폐발행과 관련한 해외사례

- EU가 전자화폐관련지침에서 비금융기관도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전자화폐발행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이 권고를 수용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수용을 고려중에 있음
 -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은행에게만 허용하여 왔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의 변화를 발표하지는 않았음
- 미국, 캐나다 등은 비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 싱가포르, 멕시코 등은 전자화폐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

나.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1) 전자화폐의 지급효력

—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보아 민법상 '대물변제'로 간주

○ 효력발생시기 이후의 사실로 지급인이 다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만, 지급이전부터 하자 있는 전자화폐를 지급한 경우는 무효)

※ 화설·판례는 자기앞수표, 계좌이체의 지급도 '변제'로 보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없음

2) 환금성보장

— 소지자의 요청시 발행자는 추가비용 없이 전자화폐 잔액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무 부담

○ 원칙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곳에서는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환금이 일정기간 (예:24시간)내에 가능해야 환금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

○ '본사에서만 100% 환금이 가능'과 같은 경우는 제외

3) '전자화폐' 명칭제한

—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전자화폐'의 문구를 업체명 또는 상품명으로 사용 가능

※ e-money, e머니, 사이버캐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음

4) 전자화폐의 카드간 직접적 양수도

— 전자화폐 발행자를 통한 전자화폐의 양수도는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 카드간 또는 저장매체간의 직접전 가치이전과 같이 발행자를 통하지 않는 개인간 양수도의 경우는 자금세탁, 뇌물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

※ EU와 영국의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카드간 가치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카드간 가치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제정방안>

➤ 1안) 카드간 가치이전을 허용

- 전자화폐가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이용되어 활성화가 용이하나,
 - 발행자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가 곤란하다는 약점

➤ 2안) 카드간 가치이전을 제한

-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해서 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발행자 미경유의 카드간 가치이전을 제한할 필요
 - 발행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시장의 선택폭을 축소시키는 약점이 있으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상품을 금지하는 경우 통상문제화 될 수도 있음

➤ 3안) 소액(예: 10만원 이하)한도내에서 카드간 가치이전 허용

- 전자화폐의 목적이 소액거래에서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소액범위내에서는 발행자를 경유하지 않는 카드간 가치이전을 허용
 - 기술적으로 일반 전자화폐와 구분되는 전자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약점이 있음

다.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한 건전성 확보장치

1) 전자금융업자(비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건전성 확보의무 준수

- 신용공여 및 이자를 지급하는 수신행위를 금지하며 구분계리를 의무화

2) 현금 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방지

- 전자화폐 발행자(금융기관 · 비금융기관 모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현행 여전법 규정과 동일)

3) 전자화폐 발행자(비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방화벽 확보)

- 원칙적으로 전자화폐 발행자로 금감위의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전자금융업무만 영위가능 (비금융업무 수행금지)

-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금융업무와 겸영허용

-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100%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전자화폐발행대금에 대해서는 여타 비금융업무 자산과 법적 ·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

(예) ① 전자화폐발행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겸영하되, 전자화폐의 발행대금 운용 및 채무부담만 별도 자회사가 담당 (SPC도 가능)

- ② 구분계리한 전자화폐의 발행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

☞ 지급보증이나 SPC설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화폐 사업의 비중이 낮고 기업의 신용도가 좋은 경우에는 특별한 의무 없이 겸영금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 자산운용의 건전성 감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겸영금지 또는 법적·실체적 분리가 필요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해서는 겸영을 금지하고 있음

- 자산·부채의 계리만을 위한 SPC설립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신뢰도가 좋은 기업의 경우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상당히 낮음

<참고> EU의 전자화폐 발행자 업무에 대한 제한

◇ EU는 '전자화폐에 대한 지침'에서 전자화폐발행자의 업무범위를 전자화폐발행업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비금융서비스로 제한하라고 각 회원국에 권고

○ 영국에서도 위의 감독지침에 따라 법제를 정비하였으며, 여타 회원국의 대부분이 동 권고를 수용하는 추세

<첨부1> EU의 전자화폐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0/46/EC)

☐ 전자화폐 정의

- 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통화적가치(monetary value)로서, 전자적 장치에 저장 되고 발행시 액면가치로 통용되며 발행자의 제3자에게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

☐ 발행기관의 범위 및 업무제한

- 비은행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e)을 인정하되,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한정
 - ※ 전자화폐 및 기타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이와 밀접히 관련된 금융 및 비 금융서비스(운영관리, 보조업무) (* 신용공여 불가)
 - 다른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신한 D/B 저장서비스

☐ 초기자본금 및 자기자본 : EUR 1백만 이상

☐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 지급준비금 : 전자화폐 발행잔액(현재 잔액과 지난 6개월 평균잔액 중 큰 금액)의 2%이상 유지 (은행등 여타 신용기관 동일)
- 투자제한 : 전자화폐기관은 전자화폐 발행액 이상을 신용위험이 없는 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해야 함
- 환금의무 : 전자화폐 발행자는 소지자가 현금 등으로 환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함
 - ※ 환금조건은 약관에 명시하되, 환금되지 않는 금액이 EUR10을 넘으면 안됨

☐ 감독 : 전자화폐기관에 대하여 1년에 2번 이상 점검(insure)실시

☐ 동지침 적용배제 : 전자화폐의 가치저장 한도가 EUR150 이하이면서

- ㉠ 전자화폐 총발행잔액이 EUR5백만 이하이며 EUR6백만을 넘은 적이 없는 경우,
- ㉡ 전자화폐가 전자화폐기관이 속한 그룹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 발행지역·발행대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동지침 적용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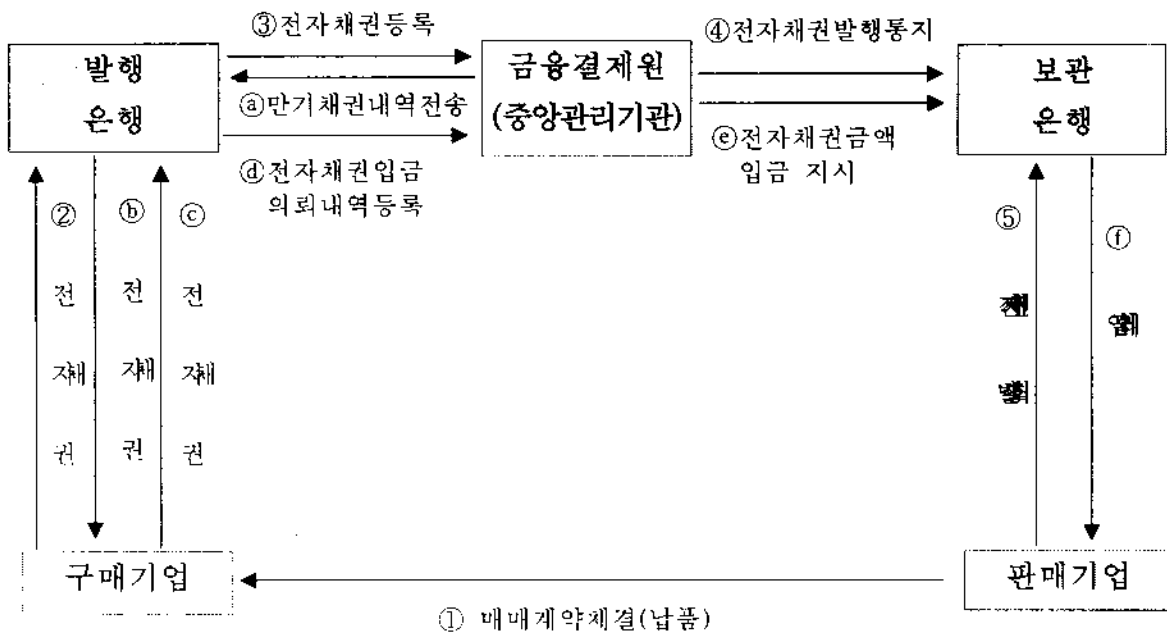
<첨부2>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개요

—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은행과 전자채권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상거래(B2B, 오프라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채권

- 판매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동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동 채권 만기시 판매대금을 결제받고,
- 구매기업은 전자채권 만기도래시 채권금액을 거래은행에 입금하여 구매대금을 완제하는 새로운 전자결제 방식

* 전자채권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발행신청 및 발행내역 교부)되며 발행내역은 금융결제원(중앙관리기관) 전자채권 등록원장에 등록·관리됨

※ 전자채권 처리절차(발행 및 결제)



* ①~⑤ 발행과정, ⑥~⑧ 결제과정